

**고1국어
신사고**

5(2) 토론과 논증(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토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입론 또는 반론으로 적절한 내용, 토론을 본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토론에서 드러나는 발언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해야 하며, 같은 내용에 대해 묻더라도 단어나 유형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선지에서 묻는 요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

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2: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찬성 1: 세계 보건 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 2: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는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찬성 1: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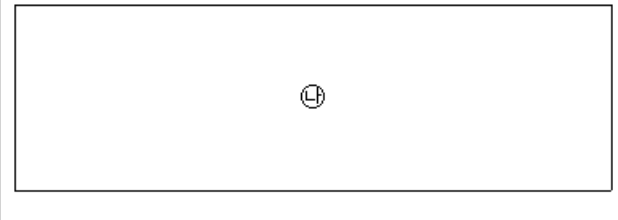
말씀이 없으시고, 설탕세만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 2: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아 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까.

반대 2: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1. 다음 중 위 토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며, 현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논의된 쟁점 중 찬성 측에 유리한 것 위주로 정리하고 반대 측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찬성 측의 해결 방안은 실행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입론에서 찬성 측 주장에 대해 근거의 객관성에 대해 질문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⑤ 사회자는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한편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2. ㉠에 나타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 토론자는 상대방이 인용한 자료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반대 측 근거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반대 1 토론자는 찬성 1 토론자의 질문에 답하며 설탕이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찬성 1 토론자는 반대 측이 제시한 대안이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찬성 측의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반대 1 토론자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며 찬성 측의 질문에 대응하고 있다.
- ⑤ 찬성 1 토론자와 반대 1 토론자는 국민의 당 섭취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3. 찬성 2의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기 때문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②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 ③ 설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 ④ 비만의 원인은 오로지 설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섭취하는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당 섭취가 주요 원인입니다.

4.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이후 빈칸 ㉔에 들어갈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의 권고만으로 설탕 섭취의 감소를 보장할 수 있나요?
- ② 기업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 ③ 이익 창출의 목적을 지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 ④ 덴마크의 사례를 설탕세 부과와 부작용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요?
- ⑤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에도 설탕세 부과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㉔)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설탕세 부과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학교 내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에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도,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에 열량이나 당 등 영양성분에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

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높습니다. 설탕세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 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사회자 : 이어서 찬성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

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 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2: ([가])

찬성 1: 세계 보건 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

5. ㉠와 ㉡의 반대 신문 과정의 발언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 반대 : 설탕세 부과에 따른 당 섭취량 감소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 ② ㉡ 반대 : 당 함유량에 따른 세금 부과에 현실성이 있긴 한가요?
- ③ ㉡ 반대 :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의 사용에 따른 폐해는 없을까요?
- ④ ㉠ 찬성 : 식생활 개선에 대한 권고 사례 중 성공한 경우가 있나요?
- ⑤ ㉠ 찬성 :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 중 당 섭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까?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

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 2: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는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찬성 1: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설탕세 부과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학교 내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에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에 열량이나 당 등 영양성분에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높습니다. 설탕세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

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사회자 : 이어서 찬성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찬성 1: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나요?

반대 1: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나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해하는 주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찬성 1: 간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품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 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요?

반대 1: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 권고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6.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 ② 반대 1은 입론에서, 상대측이 제안한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당류 표시 강화를 통해 당 섭취 제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드러내고 있다.
- ④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상대측이 인용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방식이 적절한지를 따지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⑤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설탕세 도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7. <보기>의 ㉓~㉕ 중 찬성 1의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입론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㉓ 문제가 심각함을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 후 ㉞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㉟ 반대 측 반박에 대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중요한 ㉡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한다. ㉢ 자신의 주장이 갖는 이익을 제시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는 토론 전에 실시한 반대 측의 협의 내용의 일부이다. 찬성 1의 발언과 <보기>를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반대 1 :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하려고 해?
- 반대 2 : 찬성 측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야지.
- 반대 1 : 어떤 식으로?
- 반대 2 : 찬성 측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이 당 섭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물을 거야.

- ①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 ② 설탕세를 부과한다면, 몇 퍼센트로 부과하는 것이 세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③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 ④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법제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 ⑤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1차적인 요인입니까? 오히려 나트륨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요?

9. <보기>는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국은 설탕세를 도입하여, 청량음료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는 기사를 최근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호기심이 생겨 토론에도 청중으로 참여하였다. ㉡비만, 당뇨병 등 성인병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만큼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실제로는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덴마크에

서 설탕세를 도입하였더니, 오히려 국민들이 당 함유 제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설탕세 부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고, 당 함유 식품의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 ① ㉠ : 개인적 경험과 관련지어 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 찬성 1이 제시한 의견에 일부 공감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③ ㉢ : 토론 이후 논제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 ④ ㉣ : 반대 1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⑤ ㉤ :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2: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찬성 1: ㉠ 세계 보건 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 2: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는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찬성 1: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설탕세 부과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

한다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학교 내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에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에 열량이나 당 등 영양성분에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높습니다. 설탕세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 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사회자 : 이어서 찬성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찬성 1: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나요?

반대 1: ㉡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나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해하는 주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찬성 1: 간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 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요?

반대 1: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 권고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2: 설탕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21.6%에서 2014년 25.3%로, 연간 약 0.6퍼센트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5~17세의 과체중 비율은 남자 26.4%, 여자 14.1%로, 남자의 경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평균인 24.3%보다 높습니다. 이는 6~11세의 46.6%, 12~18세의 44%가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권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였다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셨지만, 설탕세로 당 함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므로 오히려 반대 측에서 우려하신 결과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사회자: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1: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찬성 2: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 1: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

은 세계 보건 기구(WHO)의 일일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데, 이러한 나트륨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설탕세만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 2: ㉡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아 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2: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2: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고 하셨는데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반대 2: ㉢ 기업에서는 세수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용량을 줄여 설탕세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찬성 2: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설탕세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 2: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에서 무조건 당 함량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논제를 제시하며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설탕세의 개념을 정의하며 입론을 시작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설탕세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고 있다.
 - ④ 반대 측은 설탕세로 인해 부작용을 겪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찬성 측은 설탕세가 당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11. ㉠~㉣에 대한 청중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권위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군.
 - ② ㉡ : 보건복지부가 당 섭취 자제를 권고를 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고 있군.
 - ③ ㉢ : 설탕세 부과 문제를 국가의 책임과 연관하여 주장하고 있군.
 - ④ ㉣ : 나트륨에 비해 당은 소아 비만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군.
 - ⑤ ㉣ :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 답하고 있군.

최다 빈출 유형 2

사회자나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 토론 전략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하거나 연결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선지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발언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 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2: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찬성 1: 세계 보건 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 2: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는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찬성 1: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설탕세 부과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학교 내의 탄산음료 판매

를 제한하고 식품에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에 열량이나 당 등 영양 성분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높습니다. 설탕세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 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2: 설탕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21.6%에서 2014년 25.3%로, 연간 약 0.6퍼센트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5~17세의 과체중 비율은 남자 26.4%, 여자 14.1%로, 남자의 경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평균인 24.3%보다 높습니다. 이는 6~11세의 46.6%, 12~18세의 44%가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권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였다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셨지만, 설탕세로 당 함유 식품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므로 오히려 반대 측에서 우려하신 결과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건

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반대 1: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찬성 2: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 1: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보건 기구(WHO)의 일일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데, 이러한 나트륨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설탕세만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 2: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아 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까.

반대 2: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습니다. (중략)

사회자: 지금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박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 반대 1: 과연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이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즉, 설탕 섭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권고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덴마크, 멕시코 등에서 설탕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하였지만 모두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또 2014년 유럽 의회(EC)의 보고서에서도 설탕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작용이 큰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까.

㉡ 찬성 1: 반대 측에서는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비만, 당뇨와 같은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이익입니다. 반대 측에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설탕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도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미래에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 ㉠에 나타난 찬성 1의 토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탕세 부과를 통해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 ② 구체적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당 섭취와 질병 발생 위험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 ③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 ④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며, 설탕세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밝힌다.
- ⑤ 설탕세 부과로 인한 이익으로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관리와 법제화에 드는 비용 절감을 이야기한다.

13. 반대 1의 입론에서 취하고 있는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문 기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찬성 측 논리가 지닌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 ④ 자세한 수치를 밝혀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찬성 측의 의견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14. ㉠에서 반대 1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 ② 찬성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 ③ 찬성 측이 인용한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
- ④ 찬성 측 토론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며 찬성 측의 주장은 모순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 ⑤ 사실 확인을 통해 찬성 측 토론자가 앞서 제기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반대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15. ㉡과 ㉢에 활용된 반박의 전략을 가장 바르게 제시한 것은?

	㉡	㉢
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상 효과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②	상대의 주장보다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함을 강조한다.	상대방의 주장이 실행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구체적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하여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④	새로운 필수 쟁점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의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일부 인정하며 이전에 말한 자신의 주장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⑤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용한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